

# 2024 최신 입법 트렌드

---

**2024-4월/5월**

2024. 03. 16. ~ 04. 30.

- 
1. 최신 발의법률안 - 간호사법
  2. 공포법률 - 자율주행자동차법
  3. 국회 동향
  4. 헌법불합치결정 · 위헌결정 관련  
제21대 국회 통과 의원입법 소개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목차

---

## I. 최신 발의법률안 01

- 개요
- 간호사법안 소개
- 키워드로 보는 의원발의법률안 15건

[바로가기](#)

---

## II. 공포법률 06

- 개요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소개
- 법제조정정책관실 지원 실적

[바로가기](#)

---

## III. 국회 동향 11

- 이슈 분야 (저출산, 의료개혁, AI, 디지털)
- 일반행정 분야 (교육, 보훈, 청년 등)
- 경제 분야 (금융, 정보통신)
- 사회·문화 분야 (성평등, 농업, 노동, 기후 등)

[바로가기](#)

---

## IV. 헌법불합치결정·위헌결정 관련 제21대 국회 통과 의원입법 소개 15

- 헌법불합치결정 관련 법률 정비 목록
- 위헌결정 관련 법률 정비 목록

[바로가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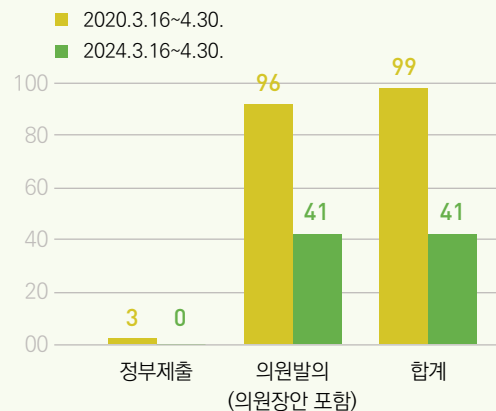
## I

## 최신 발의법률안

## 1. 개요

- 2024년 3월 16일부터 4월 30일<sup>1)</sup>까지 총 **41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모두 **의원발의법률안**이고, 정부제출법률안은 없다.
  - 지난 해 같은 기간의 경우 총 **1,034건**의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다. 그중 의원발의(위원장안 49건 포함)는 1,027건, 정부제출은 7건이었다.
- 제21대 총선 당시와의 비교
  - 제21대 총선 전후 같은 기간인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경우, 총 99건의 법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다. 그중 의원발의(위원장안 42건 포함)는 96건, 정부제출은 3건이다.
- 소개할 법률안
  - 간호인력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규율하고, 전문 간호사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간호사법안을 집중 소개한다.
  - 아울러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 등 15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한다.

[최근 1달간 발의·제출현황]



[제21대 총선 당시와의 비교]



1) 6월호부터는 대상기간을 월초부터 월말까지로 하기 위해, 이번 호에서는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달간에 대해서가 아니라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였다. 이하 'II. 공포법률'에서도 이와 같다.

## 2. 간호사법안 소개

### ■ 기본 정보

- 간호사법안(의안번호 제2126623호, 제정안)은 2024년 3월 28일 국민의힘 유의동의원 등 16인이 의원발의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 제안 이유

-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며, 의료기관을 비롯하여 재택 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전문간호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에 관하여 정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법안이 발의되었다.

### ■ 주요 내용

#### ◦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

- **(간호사의 업무)**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영양을 위한 간호,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안 제11조). 이는 현행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동일한 내용이다.
- **(간호조무사의 업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안 제13조). 이는 현행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와 동일한 내용이다.
- **(진료지원인력\* 근거 마련)**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안 제12조).

\*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은 환자에 대한 시술, 약물 처방 등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거나 진료 보조역할을 하는 직역<sup>2)</sup>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인력으로 의료현장의 오래된 관행이나, 최근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불안, 불분명성 및 의료기관에서의 관리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sup>3)</sup>

2) 이만우,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10권, 국회입법조사처, 2023, 21쪽 각주 30 참고

3) 2023. 6. 2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진료지원인력(PA) 개선 협의체」 운영 시작) 참고

#### ◦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 **(일·가정 양립지원)**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 등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간호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안 제26조).
- **(간호사 대 환자 수)**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27조).
- **(교대근무 지원)** 의료기관의 장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간호사를 대신하여 근무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둘 수 있고, 국가는 대체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28조).
- **(간호인력 지원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안 제29조).
-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간호사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안 제30조).

#### ◦ 간호정책의 수립·심의

- **(간호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간호사 등 확보 및 간호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안 제31조 및 제32조).
- **(간호정책심의회)**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 위원회를 둔다(안 제35조).

### ■ 국회 발의 현황

-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2건의 간호법안이 발의(의안번호 제2125572호, 제2126640호)되어 국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진료지원인력(PA)의 근거 및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 ■ 재의결 부결('23. 5. 30.)된 간호법안과의 비교

- 진료지원인력(PA)이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 간호사의 권리에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거부권'이 추가되었고,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 목적 조항에 따른 간호 활동의 범위 중 '지역사회'가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수정되었다.

3. 키워드로 보는 의원발의법률안 15건

2024년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41건 중 15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발의일        | 의안번호    | 의안명                           | 키워드                                                                                                                                                                                                                                      |
|------------|---------|-------------------------------|------------------------------------------------------------------------------------------------------------------------------------------------------------------------------------------------------------------------------------------|
| 2024.4.25. | 2126647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br>일부개정법률안     |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br>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여 건설<br>투자 활성화                                                                                                                                               |
| 2024.3.27. | 2126622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보증 등을 제<br>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2024.3.19. | 212661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br>일부개정법률안      | •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등에 따른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br>구제를 위해 손해액 입증책임 전환 등 소송특례 규정 마련<br>• 게임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 근거 마련                                                                                                                        |
| 2024.4.18. | 2126638 |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br>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 • 학교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육과정'의 정의, 개정 원칙과 절차, 운영<br>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 2024.4.25. | 212665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군 복무, 육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br>실업 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추가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을<br>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 2024.4.19. | 2126642 | 군인복지기본법<br>일부개정법률안            | • 국방·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br>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 매각할 수 있는 법적<br>근거 마련 등                                                                                                                                                |
| 2024.3.27. | 212662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 매장임차인*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 그 종업원을 전출하여<br>근무하게 하는 경우, 매장임차인뿐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도 「근로<br>기준법」상 사용자로 보도록 함<br>*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판매에 사용하고<br>그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자<br>※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r>(2126621)의 의결을 전제로 함 |

| 발의일        | 의안번호    | 의안명                              | 키워드                                                                                                                                                                                                    |
|------------|---------|----------------------------------|--------------------------------------------------------------------------------------------------------------------------------------------------------------------------------------------------------|
| 2024.3.27. | 2126619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b>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청구권</b> 을 명시                                                                                                                                                   |
| 2024.3.27. | 2126621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파견’을 ‘전출’로 용어 개정하고,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 종업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던 것을, 납품업자는 제외시키고, <b>매장임차인에 한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 종업원을 전출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b><br>※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126620)의 의결을 전제로 함 |
| 2024.4.11. | 2126630 |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 • <b>AI 디지털교과서</b> 의 보급 등 <b>공교육의 디지털 전환</b> 관련 시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                                                                                                                                |
| 2024.4.18. | 2126637 |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제정)         | • 안전교육, 양성평등교육, 보건교육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에서 의무 실시해야하는 <b>법정의무교육</b> 을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b>통합 실시</b> 하여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                                                                                             |
| 2024.4.25. | 2126649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 변호사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 <b>지방변호사회 회칙</b> 에서 정해야 할 사항을 총회가 아닌 <b>이사회의 결의</b> 만으로 정하는 경우 <b>무효</b> 로 함                                                                                                |
| 2024.4.26. | 2126653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 <b>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결격기간</b> 을 현행 10년에서 법원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선고하는 취업제한기간으로 변경                                                                                                                        |
| 2024.4.25. | 2126651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 출입국 및 이민 관리, 이주배경시민에 대한 처우·정착지원 및 사회 통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b>이주배경시민청</b> 을 신설                                                                                                            |
| 2024.3.26. | 2126618 |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제정)            | •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어 지역별 편차가 있는 학생 <b>인권조례</b> 의 한계를 극복하고 <b>학생인권 보장 규범</b> 이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의 종류, 지원정책 추진 등의 법적근거 마련                                                                       |



# II

## 공포법률

### 1. 개요

- 2024년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59건**의 법률이 공포되었다.
  - 제정 1건, 일부개정 49건, 전부개정 1건 및 일괄개정 8건이다.
  - 의원발의법률안이나 의원발의법률안 여러 건을 합친 대안은 **44건**, 정부제출법률안 **6건**, 의원발의법률안과 정부제출법률안을 합친 대안은 **4건**이다.
  - 일괄개정은 모두 「**행정기본법**」과 관련된 것이다. 개별 법률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상 나이를 ‘연 나이’ 기준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제명                                                        | 개정 법률                                                                                                                  |
|-----------------------------------------------------------|------------------------------------------------------------------------------------------------------------------------|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li><li>• 「청소년 보호법」</li><li>• 「청소년활동 진흥법」</li></ul>     |
|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li><l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li></ul>              |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li><li>•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li><li>•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li></ul> |

-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에서는 의원발의법률안이나 의원발의법률안 여러 건을 합친 대안 44건 중 4개 법률안에 대하여 6건의 법제 지원을 했다.
  - ※ 세부 지원 내용은 9~10쪽 참고
- 의원입법으로 최근 공포된 법률 중에서 3월 19일 공포되어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 제도**에 대한 **특례로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이번 호 집중 소개 법률로 선정하게 되었다.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개

■ 개정 배경

-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서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완전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국제기준 마련이 지연<sup>4)</sup>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개정법률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유로운 운행과 기업 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생태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되었다.
- 2023년 5월 10일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수정되어 지난 2월 29일 국회 심의를 통과했고, 3월 19일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주요 내용

-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란<sup>5)</sup>?**
  -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한 국가표준(KS)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는 차량의 사용자와 운전자동화시스템의 역할에 따라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6단계로 분류된다.

〈 자율주행 레벨(0~5) 분류기준 국가표준(KS) 〉

| 레벨 0     | 레벨 1   | 레벨 2     | 레벨 3      | 레벨 4     | 레벨 5     |
|----------|--------|----------|-----------|----------|----------|
| 운전자동화 없음 | 운전자 보조 | 부분 운전자동화 | 조건부 운전자동화 | 고도 운전자동화 | 완전 운전자동화 |
| -        | 운전자 보조 |          | 자율주행(ADS) |          |          |

-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는 지정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되, 시스템 고장·비상 시에도 자율주행시스템이 대응하는 등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한 수준을 의미한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제도 도입(제40조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 등”이라 한다)가 제작·조립·수입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을 대신하여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안전성 등 성능을 인증할 수 있다.**

4) 의안번호 제2121894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참고  
5) 의안번호 제2121894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인증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운행가능영역(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을 말한다)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안전운행 성능에 대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제41조 신설)

-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운행하려는 구역의 도로·기상·통신 등 운행 환경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형식이 적합한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승인을 할 때에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나 기간을 붙일 수 있다.

#### ◦ 성능인증과 운행에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등(제43조, 제44조, 제45조 등 신설)

-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운행을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 자동차제조사 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자동차제조사 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제조·성능상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알리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 ■ 기대 효과

- 종전에는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이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차량 판매가 제한되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과 적합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지원기업·공공기관 등에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sup>6)</sup>



6) 2024. 2. 29.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주택법」·「공향소음방지법」·「자율주행자동차법」·「철도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참고

3. 법제조정정책관실 지원 실적

-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에서는 위 공포법률 59건 중에서 의원발의법률안이나 의원발의법률안 여러 건을 합친 대안 44건 중 **4개** 공포법률에 대하여, 국회 발의 전이나 국회 심의 중에 **6건의 법제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sup>7)</sup>

- 사후검토 의견이 법률안에 반영된 사례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857호)

- **(법률안 내용)**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 **(법제처 의견)** 이에 법제처는 개정안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에 대한 의무 정도와 그 제재 내용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법제처 검토 의견이 반영되어,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되었다.



| 구분 | 의안번호         | 법 제명              | 대표 발의자 | 내용                                                                                                                                                                                                                                                                                                                         |
|----|--------------|-------------------|--------|----------------------------------------------------------------------------------------------------------------------------------------------------------------------------------------------------------------------------------------------------------------------------------------------------------------------------|
| 1  | 사후검토 2121857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 윤영찬 의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li><li>· 윤영찬 의원안 등 2건의 의원발의안을 대안 폐기하고,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통과됨</li><li>· 윤영찬의원안 2023. 5. 9. 발의</li><li>· 대안(2126567) 2024. 2. 29. 발의</li><li>· 2024. 3. 26. 공포, 2025. 3. 27. 시행</li></ul> |
| 2  | 예비검토 2123336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 맹성규 의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공간정보·위치정보사업자에 한정하던 것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모든 기업 및 학술연구·공공복리·안전 등을 위해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까지 확대함</li><li>· 2023. 7. 19. 발의</li><li>· 2024. 3. 29. 공포·시행</li></ul>                                                                                            |

7) 예비검토: 정부가 정부제출이 아닌 의원발의로 추진하는 법률안에 대해, 의원발의 전이나 대안발의 전에 법제처가 소관 부처에 법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검토: 국회의원이거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한 후에 법제처가 소관 부처에 법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 구분 | 의안번호         | 법 제명                 | 대표 발의자 | 내용                                                                                                                                                                                           |
|----|--------------|----------------------|--------|----------------------------------------------------------------------------------------------------------------------------------------------------------------------------------------------|
| 3  | 예비검토 2123371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서일준 의원 | <div>■ 조정금 산정 시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감정평가법인 등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1인의 토지소유자가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조정금 증감내역을 합산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함</div> <div>· 2023. 7. 20. 발의<br/>· 2024. 3. 29. 공포, 2024. 9. 20. 시행</div> |



| 항공안전법 관련 |              |              |        |                                                                                                                                                                                                                                                               |
|----------|--------------|--------------|--------|---------------------------------------------------------------------------------------------------------------------------------------------------------------------------------------------------------------------------------------------------------------|
| 구분       | 의안번호         | 법 제명         | 대표 발의자 | 내용                                                                                                                                                                                                                                                            |
| 4        | 예비검토 2122900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 엄태영 의원 | <div>■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 절차 등 계기비행절차를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함</div> <div>· 엄태영 의원안 등 3건의 의원발의안을 대안 폐기하고,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통과됨<br/>· 엄태영의원안 2023. 6. 27. 발의<br/>· 대안(2126459) 2024. 1. 31. 발의<br/>· 2024. 3. 19. 공포, 2024. 9. 20. 등 시행</div>          |
| 5        | 예비검토 2123051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 강대식 의원 | <div>■ 비행계획의 작성·제출·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운항승무원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div> <div>· 강대식 의원안 등 3건의 의원발의안을 대안 폐기하고,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통과됨<br/>· 강대식의원안 2023. 7. 3. 발의<br/>· 대안(2126459) 2024. 1. 31. 발의<br/>· 2024. 3. 19. 공포, 2024. 9. 20. 등 시행</div> |
| 6        | 예비검토 2123687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 강대식 의원 | <div>■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인데, 이를 항공기 기령 등을 고려하여 단축할 수 있도록 함</div> <div>· 강대식 의원안 등 3건의 의원발의안을 대안 폐기하고,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통과됨<br/>· 강대식의원안 2023. 8. 7. 발의<br/>· 대안(2126459) 2024. 1. 31. 발의<br/>· 2024. 3. 19. 공포, 2024. 9. 20. 등 시행</div>                                |

III

국회 동향

2024년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 토론회 중에서 법률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이는 23건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 10건에 대해 소개한다.

■ 주요 쟁점·이슈 분야(저출산, 의료개혁, AI, 디지털)

| 연번 | 관련 부처        | 행사명                                               | 주최                             | 주요 내용                                                                                | 장소                  | 일시                  |
|----|--------------|---------------------------------------------------|--------------------------------|--------------------------------------------------------------------------------------|---------------------|---------------------|
| 1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 이자스민 의원실                       | 돌봄서비스업 외국인력 도입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 질 개선 방안을 논의함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3. 28.(목) 오전 10시    |
| 2  | 보건복지부        |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제87차 정책세미나] 저출생 문제 해결해야 대한민국 발전한다      | 이명수 의원실                        |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3. 28.(목) 오후 6시 20분 |
| 3  | 보건복지부        | (올바른 의료개혁 토론회)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방안                  | 신현영 의원실                        |  |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4. 19.(금) 오전 10시    |
| 4  | 고용노동부        |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기념 안전보건 국제컨퍼런스] 시가 바꾸는 안전보건      | 김영진 의원실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 노동자 일터 복귀 방안을 논의함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4. 26.(금) 오후 1시 30분 |
| 5  | 보건복지부        | [제42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 국회 지구촌 보건복지 포럼 (전혜숙·김병기 의원실 등) |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 보육 인프라 개선, 주거비 부담 완화, 해외 인력 확보, 과학기술군 전환 등 인구문제 해법에 대해 논의함            | 강변서재 (국회 사랑재 옆 북카페) | 4. 30.(화) 오전 7시 30분 |

## ■ 일반행정 분야(교육, 보건, 청년 등)

| 연번 | 관련 부처              | 행사명                                  | 주최              | 주요 내용                                                                                          | 장소             | 일시                  |
|----|--------------------|--------------------------------------|-----------------|------------------------------------------------------------------------------------------------|----------------|---------------------|
| 1  | 교육부                | 비리사학 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                   | 윤미향·강민정 의원실     | 임시이사 체제 사학의 정상화 현황 및 문제점 해결 방안을 논의함                                                            |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3. 27.(수) 오후 2시     |
| 2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 진실화해위원회 민간인 학살 과거사 청산 이대로 좋은가?       | 윤미향 의원실         |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3. 28.(목) 오후 2시     |
| 3  |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의 가치 확산 세미나 : 디지털로 열어가는 청년의 청렴!    | 안호영 의원실         |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3. 29.(금) 오후 1시 30분 |
| 4  | 국무조정실              | 제1회 청년포럼                             | 최승재 의원실         |            |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 4. 25.(목) 오후 7시     |
| 5  | 행정안전부              | 기부자 편의성 강화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 조승래·윤영덕·윤희인 의원실 |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 편의성 개선 방안과 지정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                                             |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4. 29.(월) 오후 3시     |

## ■ 경제 분야(금융, 정보통신)

| 연번 | 관련 부처                       | 행사명                                                 | 주최      | 주요 내용                                                                                                     | 장소             | 일시                   |
|----|-----------------------------|-----------------------------------------------------|---------|-----------------------------------------------------------------------------------------------------------|----------------|----------------------|
| 1  | 금융위원회                       | 반발하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사 내부통제시스템 혁신방안 국회세미나  | 민병덕 의원실 |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3. 29.(금) 오후 2시      |
|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28GHz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소비자 후생 증대, 경쟁 활성화, 산업 발전 관점에서 | 변재일 의원실 | 향후 정보통신산업 발전, 공정경쟁 환경 조성, 소비자 후생 증대 측면에서 '제4세대 이동통신'으로 불리는 28GHz 주파수의 신규 사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과 수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 논의함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 4. 15.(월) 오전 10시 30분 |

## ■ 사회·문화 분야(성평등, 농업, 노동, 기후 등)

| 연번 | 관련 부처   | 행사명                                                       | 주최                                                   | 주요 내용                                                                      | 장소                   | 일시                  |
|----|---------|-----------------------------------------------------------|------------------------------------------------------|----------------------------------------------------------------------------|----------------------|---------------------|
| 1  | 여성가족부   | 지금, 어디에도 없는 성평등: 정치와 정책의 방향 모색                            | 신현영 의원실                                              |                                                                            | 의원회관<br>신관<br>제1소회의실 | 3. 18.(월)<br>오전 10시 |
| 2  | 농림축산식품부 | 제22대 총선과 농업·농민·농촌 농정공약 토론회                                | 강성희<br>· 강은미<br>· 심상정<br>· 윤미향<br>· 윤영덕<br>· 이원택 의원실 |                                                                            | 의원회관<br>제1소회의실       | 3. 18.(월)<br>오후 2시  |
| 3  | 보건복지부   | [제4회 생명존중의날 기념행사 및 지자체 책임자 정책토론회]<br>‘자살예방’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자! | 강기운 의원실                                              | 자살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논의함                                               | 의원회관<br>제1소회의실       | 3. 25.(월)<br>오전 10시 |
| 4  | 고용노동부   |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                                 | 양경규<br>· 심상정<br>· 강성희 의원실                            |                                                                            | 의원회관<br>제8간담회의실      | 4. 3.(수) 오<br>전 10시 |
| 5  | 환경부     | 대한민국공공성실천<br>학술세미나<br>(기후변화와 녹색경제)                        | 유정주 의원실                                              |                                                                            | 의원회관 신관<br>제2세미나실    | 4. 5.(금)<br>오후 3시   |
| 6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br>위험에 대한 토론회                                 | 엄태영 의원실                                              |                                                                            | 의원회관<br>대회의실         | 4. 22.(월)<br>오후 1시  |
| 7  | 고용노동부   | 라이더(배달노동)<br>위험성평가 연구발표 및<br>대책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양경규 의원실                                              |                                                                            | 의원회관 신관<br>제1세미나실    | 4. 23.(화)<br>오후 2시  |
| 8  | 농림축산식품부 | 밀원 부족 해결을 위한<br>꿀벌목장 제도화 토론회                              | 홍문표 의원실                                              | 기후변화와 밀원(蜜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꿀벌목장제도 도입 필요성 및 제도화 방안을 논의함                       | 의원회관 신관<br>제1세미나실    | 4. 24.(수)<br>오후 3시  |
| 9  | 환경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br>새로운 법체계,<br>지구법의 첫 걸음                      | 이소영 의원실                                              |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구법이 필요한 이유와 해외 판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함 | 의원회관<br>제8간담회의실      | 4. 26.(금)<br>오후 2시  |

| 연번 | 관련 부처           | 행사명                                                    | 주최         | 주요 내용                                                                                                              | 장소                           | 일시                 |
|----|-----------------|--------------------------------------------------------|------------|--------------------------------------------------------------------------------------------------------------------|------------------------------|--------------------|
| 10 | 고용노동부           |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관계<br>승계 입법토론회                              | 양경규<br>의원실 | 경비원·안전원 등 현장 사례를 토대로<br>원·하청 간의 계약 과정에서 용역업체가<br>변경될 경우 이전의 용역업체에서 근무<br>하던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할 수<br>있도록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함 | 국회 본청<br>223호                | 4. 30.(화)<br>오후 2시 |
| 11 | 보건복지부,<br>기획재정부 |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br>정치적 로드맵 국회토론회]<br>제22대 국회를 기본소득<br>국회로 | 옹혜인<br>의원실 | 기본소득 담론의 위상 변화와 과제,<br>공유부 기본소득과 성장모델 전환을<br>논의함                                                                   | 스카우트홀<br>(한국스카우트<br>연맹회관 1층) | 4. 30.(화)<br>오후 3시 |

※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전문가 간담회

| 연번 | 주제                                       | 발표(발제)자                                                         | 토론자                                                                          | 장소                    | 일시                      |
|----|------------------------------------------|-----------------------------------------------------------------|------------------------------------------------------------------------------|-----------------------|-------------------------|
| 1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br>도입 이후 현황 및 보완 과제        | 남재우 연구위원<br>(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 이환태 상무<br>(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br>강성호 선임연구위원<br>(보험연구원)<br>이윤아 입법조사관<br>(금융공정거래팀) | 국회<br>입법조사처<br>제2세미나실 | 3. 18.(월)<br>오후 2시      |
| 2  | 자원순환보증금 재활용의무이행<br>현황 및 이를 통한 재활용 검토     | 김경 교수<br>(서울과학기술대학교<br>환경기술연구소)                                 | -                                                                            | 국회<br>입법조사처<br>제2세미나실 | 3. 18.(월)<br>오후 2시      |
| 3  | 기업과 주주의 이익 조화를 위한<br>회사법체계 정비방안          | 정우용 박사<br>(한국상장회사협의회)                                           | -                                                                            | 국회<br>입법조사처<br>제2세미나실 | 3. 20.(수)<br>오후 2시      |
| 4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br>교원과 학생의 역량            | 계보경 부장<br>(한국교육학술정보원<br>AI디지털교과서기획부장)<br>김자영 연구위원<br>(경기도교육연구원) | 김차명 대표<br>(참쌤스쿨)                                                             | 국회<br>입법조사처<br>제2세미나실 | 3. 21.(목)<br>오후 2시      |
| 5  | 송전선로 지중화<br>관련 입법 동향 및 과제<br>(입법영향분석 관련) | 이성학 실장<br>(한국전력공사 건설혁신실)                                        | -                                                                            | 국회<br>입법조사처<br>제2세미나실 | 3. 26.(화)<br>오후 3시      |
| 6  | 회사법체계 정비를 위한<br>실무상 고려사항                 | 황현영 연구위원<br>(자본시장연구원)                                           | -                                                                            | 국회<br>입법조사처<br>제2세미나실 | 3. 27.(수)<br>오전 10시 30분 |
| 7  | 순환경제 관련 입법의 평가와<br>개선과제                  | 이유봉 박사<br>(한국법제연구원)                                             | -                                                                            | 국회<br>입법조사처<br>제2세미나실 | 3. 29.(금)<br>오전 10시     |
| 8  | 주요국의 회사법체계와 시사점 1                        | 심영 교수<br>(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국회<br>입법조사처<br>제2세미나실 | 4. 12.(금)<br>오후 2시      |
| 9  | 주요국의 회사법체계와 시사점 2                        | 원용수 교수<br>(전)서울시립대학교<br>법학전문대학원)                                | -                                                                            | 국회<br>입법조사처<br>제2세미나실 | 4. 18.(목)<br>오후 2시      |
| 10 | 회사법체계 정비의 방향성                            | 이형규 명예교수<br>(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국회<br>입법조사처<br>제2세미나실 | 4. 25.(화)<br>오전 10시     |

IV

헌법불합치결정 · 위헌결정 관련

제21대 국회 통과 의원입법 소개

제21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또는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 정비를 위해 의원입법(정부제출안과 통합된 위원장 대안 포함)으로 통과된 법률안은 35건(헌법불합치 19건, 위헌 16건)이며, 그 내용은 다음 표에서 간략하게 설명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번호에서 ‘헌가’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 ‘헌마’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 ‘헌바’는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여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 헌법불합치결정 관련 법률 정비 목록

| 대상법률                          |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번호(선고일)         | 결정요지 및 관련 개정사항                                                                                                                                                                                                                                                                                                                                                                                                                         | 의안번호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2018헌마9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li><li>가정폭력행위자 등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발급 등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함<br/>(법률 제18651호, 2021. 12. 28. 공포)</li></ul>                                                                                                                                                                     | 2113760<br>(위원장대안-원안가결) |
| 공무원연금법                        | 2019헌바161<br>(2022.1.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헌법재판소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li><li>이에,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받는 근로소득월액만큼만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개정함<br/>(법률 제19513호, 2023. 6. 30. 공포)</li></ul>                                                                                                           | 2122790<br>(위원장대안-원안가결)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019헌바131<br>(2020.11.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의 발생 기간을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환매권의 구체적인 행사를 위한 내용이라기보다 환매권 발생 자체에 관한 기간을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사실상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li><li>이에, 환매권의 발생기간은 제한하지 않고 환매권의 행사 기간만 제한하여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함<br/>(법률 제18386호, 2021. 8. 10. 공포)</li></ul> | 2111671<br>(위원장대안-원안가결) |

| 대상법률                         | 헌법재판소 결정<br>사건번호(선고일)                                                                                                                                                                  | 결정요지 및 관련 개정사항                                                                                                                                                                                                                                                                                                  | 의안번호                    |
|------------------------------|----------------------------------------------------------------------------------------------------------------------------------------------------------------------------------------|-----------------------------------------------------------------------------------------------------------------------------------------------------------------------------------------------------------------------------------------------------------------------------------------------------------------|-------------------------|
| 공직선거법                        | 2018헌마730<br>(2019.12.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헌법재판소는 확장장치 등의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li> <li>이에,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장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함 (법률 제18790호, 2022. 1. 18. 공포)</li> </ul>                                                       | 2114208<br>(위원장대안-원안가결) |
| 공직선거법                        | 2018헌마415<br>(2019.2.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 공직선거법(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선거구구역표 중 인구편차 상하 50%를 넘는 부분(당시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및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은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조정함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공포)</li> </ul>                                                                 | 2115295<br>(위원장대안-원안가결) |
| 공직선거법                        | 2020헌마895<br>(2022.1.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헌법재판소는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li> <li>이에,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고 귀국한 경우 선거일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19325호, 2023. 3. 29. 공포)</li> </ul>                                        | 2120795<br>(위원장대안-원안가결) |
| 공직선거법                        | 2017헌가1 등<br>(2022. 7. 21)<br>2017헌바100 등<br>(2022. 7. 21)<br>2018헌바357 등<br>(2022. 7. 21.)<br>2017헌가4<br>(2022. 7. 21.)<br>2021헌바301<br>(2022. 11. 24.)<br>2023헌가12<br>(2023. 6. 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금지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함 (법률 제19696호, 2023. 8. 30. 공포)</li> </ul>      | 2124005<br>(위원장대안-원안가결) |
| 국가유공자 등<br>예우 및 지원에<br>관한 법률 | 2018헌가6<br>(2021.3.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급권자의 수를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후위 수급권자로 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li> <li>이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간 협의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지급하며,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개정함 (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공포)</li> </ul> | 2118732<br>(위원장대안-원안가결) |
| 국민건강보험법                      | 2018헌바433 등<br>(2023. 3. 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이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은 지급하도록 하고,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지급보류처분을 취소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법률 제20324호, 2024. 2. 20. 공포)</li> </ul>                                                                           | 2126452<br>(위원장대안-원안가결) |

| 대상법률                                  | 헌법재판소 결정<br>사건번호(선고일)     | 결정요지 및 관련 개정사항                                                                                                                                                                                                                                                                                                                                                                                                                                                                                       | 의안번호                         |
|---------------------------------------|---------------------------|------------------------------------------------------------------------------------------------------------------------------------------------------------------------------------------------------------------------------------------------------------------------------------------------------------------------------------------------------------------------------------------------------------------------------------------------------------------------------------------------------|------------------------------|
| 국적법                                   | 2016헌마889<br>(2020.9.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 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국적 이탈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li><li>• 이에,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하여 외국에 둔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함<br/>(법률 제18978호, 2022. 9. 15. 공포)</li></ul>                                                                                          | 2117061<br>(위원장대안<br>-원안가결)  |
| 별정우체국법                                | 2019헌바161<br>(2022.1.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헌법재판소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li><li>• 이에,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 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받는 근로소득 월액만큼만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개정함<br/>(법률 제20256호, 2024. 2. 13. 공포)</li></ul> <p>※ 별정우체국 직원의 경우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서 그 퇴직연금 등을 관리하고 있고, 2019헌바161은 별정우체국법에 대한 결정은 아니지만, 그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별정 우체국법도 같이 개정한 것임</p>                                    | 2122919<br>(박형수의원안<br>-원안가결) |
| 세무사법                                  | 2015헌가19<br>(2018.4.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헌법재판소는 2003년 12월 31일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li><li>• 이에,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 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br/>(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공포)</li></ul> <p>※ 2016헌마116으로 헌법불합치 결정된 법인세법 제60조제9항 제3호, 소득세법 제70조제6항제3호는 세무사법을 개정하면서 세무사법 부칙에서 타법 개정으로 정비함</p>                | 2113216<br>(위원장대안<br>-원안가결)  |
| 의료사고<br>피해구제 및<br>의료분쟁 조정<br>등에 관한 법률 | 2018헌바504<br>(2022.7.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관하여,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li><li>•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대불비용 부담액을 산정·부과·징수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함<br/>(법률 제19864호, 2023. 12. 19. 공포)</li></ul> | 2124358<br>(최재형의원안<br>-수정가결) |

| 대상법률                     | 헌법재판소 결정<br>사건번호(선고일)                         | 결정요지 및 관련 개정사항                                                                                                                                                                                                                                                                                                                                                                                                                                                                                                                                      | 의안번호                        |
|--------------------------|-----------------------------------------------|-----------------------------------------------------------------------------------------------------------------------------------------------------------------------------------------------------------------------------------------------------------------------------------------------------------------------------------------------------------------------------------------------------------------------------------------------------------------------------------------------------------------------------------------------------|-----------------------------|
| 장애인활동<br>지원에 관한 법률       | 2017헌가22,<br>2019헌가8<br>(병합,<br>2020.12.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li> <li>이에,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함<br/>(법률 제18901호, 2022. 6. 10. 공포)</li> </ul>                                                                                                                                                                                                                                                                                        | 2115737<br>(위원장대안<br>-원안가결) |
| 전기통신사업법                  | 2016헌마388<br>(2022.7.21.)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관서의 장 등이 수사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함)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한 규정과 관련하여,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관서의 장 등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하고도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li> <li>이에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사후 통지절차를 마련함<br/>(법률제19856호, 2023. 12. 29. 공포)</li> </ul>                                                                                                                                                                          | 2125983<br>(위원장대안<br>-원안가결) |
| 정치자금법                    | 2018헌마301<br>(2019.12.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대해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li> <li>이에, 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추가함<br/>(법률 제17885호, 2021. 1. 5. 공포)</li> </ul>                                                                                                                                                                                                                                                                                                | 2106262<br>(위원장대안<br>-원안가결) |
|                          | 2018헌마301<br>(2019.12.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함<br/>(법률 제20348호, 2024. 2. 20. 공포)</li> </ul>                                                                                                                                                                                                                                                                                                                                                                                                                                            | 2126177<br>(위원장대안<br>-원안가결) |
| 형사보상 및<br>명예회복에 관한<br>법률 | 2018헌마998,<br>2019헌가16<br>(병합,<br>2022.2.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헌법재판소는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li> <li>이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보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경우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한정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도록 개정함<br/>(법률 제19857호, 2023. 12. 19. 공포)</li> </ul> | 2125987<br>(위원장대안<br>-원안가결) |
| 형의 실효 등에<br>관한 법률        | 2018헌가2<br>(2021.6.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헌법재판소는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li> <li>이에,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해당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 간 보존한 후 삭제하도록 개정함<br/>(법률 제19515호, 2023. 7. 6. 공포)</li> </ul>                                                                                                                                                                                                                     | 2122982<br>(위원장대안<br>-원안가결) |

## 2024 최신 입법 트렌드

### ■ 위헌결정<sup>8)</sup> 관련 법률 정비 목록

| 대상법률                            |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번호(선고일)                                                                                                                                                                       | 결정요지 및 관련 개정사항                                                                                                                                                                                                                                                                            | 의안번호                         |
|---------------------------------|------------------------------------------------------------------------------------------------------------------------------------------------------------------------------------------|-------------------------------------------------------------------------------------------------------------------------------------------------------------------------------------------------------------------------------------------------------------------------------------------|------------------------------|
| 5·18민주화운동<br>관련자 보상 등에<br>관한 법률 | 2019헌가17<br>(2021. 5. 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함 (법률 제19106호, 2022. 12. 27. 공포)</li> </ul>                                                                                             | 2118758<br>(위원장대안<br>-원안가결)  |
| 공직선거법                           | 2019헌가11<br>(2021. 4. 29.)<br>2021헌가36<br>(2022. 12. 22.)<br>2021헌가24<br>(2022. 6. 30.)<br>2018헌마456 등<br>(2021. 1. 28.)<br>2018헌바357 등<br>(2022. 7. 21.)<br>2018헌바164<br>(2022. 7. 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함 (법률 제19696호, 2023. 8. 30. 공포)</li> </ul>                                                                                                                                  | 2124005<br>(위원장대안<br>-원안가결)  |
|                                 | 2018헌바146<br>(2022. 2. 24.)<br>2013헌가1<br>(2016. 6.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함 (법률 제17813호, 2020. 12. 29. 공포)</li> </ul>                                                                                                                                                          | 2106263<br>(위원장대안<br>-원안가결)  |
|                                 | 2019헌가3<br>(2021. 9.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9년 2월 3일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직계존속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부칙에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여성 등록 의무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과 같이 배우자의 직계 존속 소유재산을 등록하도록 하였는데, 해당 부칙을 삭제함 (법률 제19064호, 2022. 11. 15. 공포)</li> </ul>                           | 2109287<br>(전주혜의원안<br>-원안가결) |
| 도로교통법                           | 2019헌가9 등<br>(2020. 6.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를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사유에서 삭제함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공포)</li> </ul>                                                                                                                                                  | 2106255<br>(위원장대안<br>-원안가결)  |
|                                 | 2019헌바446 등<br>(2021. 11. 25.)<br>2021헌가30 등<br>(2022. 5. 26.)<br>2021헌가32 등<br>(2022. 5. 26.)<br>2022헌가14<br>(2022. 8. 31.)<br>2022헌가18 등<br>(2022. 8. 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고 있는 규정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전범과 후범 사이 시간적 제한(10년 내)을 정함 (법률 제19158호, 2023. 1. 3. 공포)</li> </ul> | 2118781<br>(위원장대안<br>-원안가결)  |

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 2024 최신 입법 트렌드

| 대상법률                      | 헌법재판소 결정<br>사건번호(선고일)                   | 결정요지 및 관련 개정사항                                                                                                                                                                                                                                                                                                       | 의안번호                         |
|---------------------------|-----------------------------------------|----------------------------------------------------------------------------------------------------------------------------------------------------------------------------------------------------------------------------------------------------------------------------------------------------------------------|------------------------------|
| 변호사시험법                    | 2017헌마1329<br>(2019. 7. 25.)            |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기간을 6개월로 한 종전 부칙을 삭제하고,<br>그 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5년으로 정함<br>(법률 제17569호, 2020. 12. 08. 공포)                                                                                                                                                                                                                    | 2102375<br>(전용기의원안<br>-수정가결) |
| 병역법                       | 2019헌마534<br>(2021. 11. 26.)            | • 사회복지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br>(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공포)                                                                                                                                                                                                                                                   | 2124630<br>(위원장대안<br>-원안가결)  |
| 새마을금고법                    | 2018헌가12<br>(2019. 5. 30.)              | •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br>금지기간을 '임원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법률에서<br>직접 규정함<br>(법률 제19329호, 2023. 4. 11. 공포)                                                                                                                                                                                             | 2120802<br>(위원장대안<br>-원안가결)  |
| 성폭력범죄의<br>처벌 등에 관한<br>특례법 | 2018헌바524<br>(2021. 12. 23.)            | •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19세<br>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br>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br>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19세 미만 피해<br>자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br>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br>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 등에 한해 증거로 할<br>수 있도록 함<br>(법률 제19517호, 2023. 7. 11. 공포)   | 2122781<br>(위원장대안<br>-원안가결)  |
| 신용협동조합법                   | 2018헌바278<br>(2020. 6. 25.)             | •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예외를 정관에서 정할 수<br>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선거운동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br>정관이 아닌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br>(법률 제17803호, 2020. 12. 29. 공포)                                                                                                                                                                               | 2102078<br>(유동수의원안<br>-수정가결) |
| 예비군법                      | 2019헌가12<br>(2022. 5. 26.)              | • 예비군대원 본인을 대신하여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세대주<br>등이 소집통지서 원본을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직접<br>전달하는 방법 외에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br>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대주 등의<br>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반 시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br>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br>세대주 등의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br>과태료로 전환함.<br>(법률 제19082호, 2022. 12. 13. 공포) | 2118430<br>(위원장대안<br>-원안가결)  |
| 의료기기법                     | 2017헌가35,<br>2019헌가23<br>(2020. 8. 28.) | •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br>정한 심의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br>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br>위헌결정하였는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br>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br>(법률 제17978호, 2021. 3. 23. 공포)                                                                                          | 2108389<br>(위원장대안<br>-원안가결)  |

# 2024 최신 입법 트렌드

| 대상법률            | 헌법재판소 결정<br>사건번호(선고일)          | 결정요지 및 관련 개정사항                                                                                                                                                                                                                                                                                                            | 의안번호                                     |
|-----------------|--------------------------------|---------------------------------------------------------------------------------------------------------------------------------------------------------------------------------------------------------------------------------------------------------------------------------------------------------------------------|------------------------------------------|
| 청원경찰법           | 2017헌가26<br>(2018. 1.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원경찰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수뢰, 성폭력범죄 및 직무와 관련 횡령 등의 죄를 범한 사람만 당연 퇴직되도록 함<br/>(법률 제19033호, 2022. 11. 15. 공포)</li> </ul>                                                               | 2108616<br>(황운하의원안<br>-수정가결)             |
| 해상교통안전법<br>(제정) | 2022헌가10<br>(2022. 8. 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회 이상 음주선박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 대상자를 음주선박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한 경우로 적용기간을 제한함<br/>(법률 제19573호, 2023. 7. 25. 공포)</li> </ul> ※ 위험대상 조항이 있던 구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과 해상교통 안전법으로 분법됨                                                                                    | 2117474<br>(이양수의원안<br>-수정가결)             |
| 형법              | 2015헌바239 등<br>(2017. 10. 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정 액수 이상의 벌금형에 대해서 노역장 유치의 최소 기간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여, 고액 벌금형을 단기의 노역장 유치로 무력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해당 규정을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부터가 아니라)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 하도록 한 것이 형법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됨에 따라 해당 부칙을 삭제함<br/>(법률 제17511호, 2020. 10. 20. 공포)</li> </ul> | 2104172<br>(법제사법위원회<br>위원장 발의.<br>대안 아님) |

# 2024 최신 입법 트렌드

발행처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8층

의원 입법에 필요한 정부 업무를 지원합니다.  
\* 의원발의 전·후 법률안 검토 및 부처 간 이견 조정

|                    |              |
|--------------------|--------------|
| ■ 법제조정총괄법제관        | 044-200-6802 |
| 의원입법 지원 총괄         | 044-200-6803 |
| 의원입법 지원            | 044-200-6805 |
| 법률안 모니터링           | 044-200-6822 |
| ■ 행정법제관            | 044-200-6568 |
| 행정 분야 의원입법 지원(1)   | 044-200-6804 |
| 행정 분야 의원입법 지원(2)   | 044-200-6809 |
| 행정 분야 의원입법 지원(3)   | 044-200-6812 |
| ■ 경제법제관            | 044-200-6815 |
| 경제 분야 의원입법 지원(1)   | 044-200-6560 |
| 경제 분야 의원입법 지원(2)   | 044-200-6813 |
| ■ 사회문화법제관          | 044-200-6820 |
| 사회문화 분야 의원입법 지원(1) | 044-200-6810 |
| 사회문화 분야 의원입법 지원(2) | 044-200-6807 |